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671만명… 모든 사업자에 신고 도움자료 제공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통 도움자료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이 담겨 있으며,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에서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금비서 대상자 15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약 2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년 동기대비 21만명 증가한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늘어난 128만개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무주택자 세금혜택 확대… 동종업종 재취직 요건 폐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9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재취직을 위한 공백기간을 빼고 3년을 채워서 받는다.

경력단절여성의 동종업종 재취직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남성도 2~15년 이내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우 업종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료 예정인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

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공제요건을 공제납입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올해 1년에 한해 실업자·비정규직 생계비 대부 한도를 대폭 확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다.

무주택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가 지 확대한다.

24년째 높은 상속세율…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해야"

현행 상속세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4년째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 과세표준 구간을 고정하고 있어 상속세를 인하고 공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민의힘 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 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과중해 인한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 개선방으로 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과세하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대부분(19개국)은 유산취득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산세형은 실제 상속분이 많은 적든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